



제1차 전당대회



2021. 6. 11.(금)



당헌 개정(안)

제1차 전당대회(2021. 6. 11.)

I. 의결주문

- 2020년 5월 27일(水) 미래통합당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인함

II. 개정 주요 내용

- 당헌 개정(안) ※ 별첨자료 :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III. 관련근거

- 당헌 제13조 2항 및 제91조 3항

[당헌 제13조]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과 개정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제91조]

-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자료 - 주요내용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당헌 제100조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근거 규정 마련	개정
당헌 제101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규정	개정
부칙 제2조	○ 전당대회 개최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예외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 100 조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대의기관 및 각급회의의 결의는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u>
(신설)	<u>제 101 조 (사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사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u>
부칙 (2020. 2. 14) 제 2 조 (경과조치 및 특례) ② 제1항의 당직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후략)	부칙 (2020. 2. 14) (현행과 같음)
(신설)	<u>⑧ 당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신설)	부칙 (2020. 5. 27) <u>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5월 27일 개최한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u>

강령 개정(안)

제1차 전당대회(2021. 6. 11.)

I. 의결주문

- 2020년 9월 2일(水) 미래통합당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인함

II. 개정 주요 내용

- 강령 개정(안) ※ 별첨자료 : 개정 강령 전문

III. 관련근거

- 당헌 제13조 2항 및 제91조 3항

[당헌 제13조]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과 개정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제91조]

-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무장, 지구환경 변화와 거듭되고 있는 질병과 재난,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지향하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정치를 실천한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의 분산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 법이 약자에게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모든 영역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이 중심되는 사회제도와 문화를 마련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제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선언한다.

우리의 믿음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6. 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8.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9. 우리는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당헌 개정(안)

제1차 전당대회(2021. 6. 11.)

I. 의결주문

- 2020년 9월 2일(水) 미래통합당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인함

II. 개정 주요 내용

- 당헌 개정(안) ※ 별첨자료 :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III. 관련근거

- 당헌 제13조 2항 및 제91조 3항

[당헌 제13조]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 2. 당헌의 채택과 개정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제91조]

-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자료 - 주요내용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당헌 제1조 (명칭)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당헌 제2조 (목적)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당헌 제3조 (구성)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당헌 제12조 (구성)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당헌 제18조 (구성)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당헌 제43조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 ○ 특별위원회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	개정 신설
당헌 제99조 (여론조사 특례)	○ 당의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변경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당 헌

현행	개정안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u>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u> 이라 한다.	제 1 조 (명칭) ----- <u>국민의힘</u> ----- -----.
제 2 조 (목적) <u>미래통합당</u> 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생략) <u>미래통합당</u> 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당내 인재양성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자치 영역을 확대한다. (생략)	제 2 조 (목적) <u>국민의힘</u> ----- ----- ----- (현행과 같음) <u>국민의힘</u> ----- ----- -----, (현행과 같음)
제 3 조 (구성) ① <u>미래통합당</u> 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 3 조 (구성) ① <u>국민의힘</u> ----- ----- -----. ② (현행과 같음)
제 12 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 18. (생략) 19. <u>미래통합당</u> 국회보좌진위원회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제 12 조 (구성) ①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u>국민의힘</u> 국회보좌진위원회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제 18 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입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 26. (생략) 27. <u>미래통합당</u> 국회보좌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전국위원	제 18 조 (구성)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u>국민의힘</u> 국회보좌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전국위원

<p>제 43 조 (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p> <p>1. ~ 25. (생략)</p> <p><u><신설></u> <u><신설></u></p> <p>② (생략)</p>	<p>제 43 조 (상설위원회) ① ----- ----- -----.</p> <p>1. ~ 25. (현행과 같음)</p> <p><u>26. 국민통합위원회</u> <u>27. 약자와의동행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99 조 (여론조사 특례) ①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u>미래통합당</u>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 99 조 (여론조사 특례) ① ----- -----<u>국민의힘</u> -----.</p> <p>② (현행과 같음)</p>

당헌 개정(안)

제1차 전당대회(2021. 6. 11.)

I. 의결주문

- 2021년 4월 22일(木) 국민의힘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인함

II. 개정 주요 내용

- 당헌 개정(안) ※ 별첨자료 :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III. 관련근거

- 당헌 제13조 2항 및 제91조 3항

[당헌 제13조]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 2. 당헌의 채택과 개정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제91조]

-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자료 - 주요내용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제16절 의원총회	제55조 (기능)	○ 의원총회 기능 중 정책위의장 선출 기능 삭제	개정
제18절 정책 위원회	제68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주인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당 헌

현 행	개 정 안
제16절 의원총회 제 55 조 (기능) ① (생략)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u>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u> 선출 2. ~ 9. (생략)	제16절 의원총회 제 55 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u>원내대표의</u> 선출 2. ~ 9. (현행과 같음)
제18조 정책위원회 제 68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 ② (생략) ③ <u>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u> <u>(신설)</u> ④ ~ ⑥ (생략) ⑦ <u>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	제18조 정책위원회 제 68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주인을 받아 임명한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 ⑤ ~ ⑦ (현행 4항~6항과 같음) <u>(삭제)</u>

부칙 (2021. 4. 22.)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1년 4월 22일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및 특례) 이 당헌 시행 이전에 선출된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